

시장논리만이 능사인가?

육계업계가 깊은 불황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 때 kg당 2천원을 호가하며 2년 가까이 ‘좋은 시세’를 구가해 왔던 산지 육계가격이 지난 추석을 전후로 하락, 이달 초 가까스로 1천원대를 회복하기는 했지만 당분간 생산비 이상의 안정적인 시세 형성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사회 전반에 걸친 경기침체와 고유가 시대의 도래 속에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닭고기 소비가 크게 위축된 반면 국내산 닭출하 증가와 함께 닭고기 수입 역시 주요 수출국들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급수조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업계 누구도 이 같은 가격추세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장기불황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향후 국내 생산추이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육용종계입식량을 살펴보면 이러한 시각이 결코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올 들어 입식된 육용종계는 지난 8월 현재 3

백71만9천5백수(준용계 25만4천수 포함)로 전년동기 대비 24.1%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연간 최대 입식량(4백53만9천수)을 기록했던 지난 2002년 동기간(1~8월)의 규모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커다란 변수가 없는 한 올해 육용종계입식량은 최대 5백만수대에 달해 3년전의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준용계를 제외하더라도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육용원종계 쿼터’ 9만4천수를 무색케 함으로써 육용원종계업계에 대한 환우 및 경제수명 연장의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6~8월 3개월간의 육용종계입식량이 무려 1백58만수에 달하는 등 하반기 들어 그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내년도 업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장기불황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계업계 공동의 대책이나 감축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미 그간의 수급조절 사업 전개를 통해 업계 상호간 불신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기 때-

문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어렵사리 성사된 원종계 쿼터제조차도 그 존속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축이라든가 수급조절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힘든 분위기”라며 “결국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지 않는 한 대화나 협의를 통한 육계업계 공동의 대응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생산비 이하의 바닥시세가 최소한 수개월 이상은 더 지속돼야 한다”는 시각이 업계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 육계 계열화업체들이 생산량 확대에 집중해온 데다 유사계열화업체까지 가세, 이제는 자체 보유 종계물량도 적지 않은 상황인 만큼 “갈 때까지 가야 비로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1년 이상 계속된 호황 속에서 나름대로 여유자본을 축적, 그 누구보다 오랜 불황을 버틸 수 있다는 저마다의 자신감(?)은 이러한 대응을 뒷받침하는 ‘힘’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장논리에 따른 구조조정에 막대한 손실이 뒤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댓가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조류인플루엔자 파동에 따른 외국산 닭고기의 금수조치를 또다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수입육 전용시장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국내산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시세차익을 겨냥한 신규자본의 진출을 그 어느 산업보다 쉽게 허용하는 국내 육계산업의 특성 역시 기존업계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계업계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불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냉정함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각자가 종계입식에서부터 신중을 기하되 범업계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불황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종계 D/B 사업 및 환우근절 체계도 이번 기회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본격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육계자조금 사업은 업계 스스로 산업 자체의 ‘파이’를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전 육계업계가 조기정착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

이 일호 팀장
축산신문사

